

#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이세우, 방용승, 염경석, 서정길

수신처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전북지역 언론사
참고	언론사는 사회부
내용	4월 22일 버스파업 노사정 만남에 대한 논평
담당자	063-278-9331 (채민)

[논평]

##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대타결을 기대한다.

### 4월22일 버스파업 노사정 만남에 대한 대책위 논평

내일(22일) 버스파업 해결을 위해 노사와 송하진 전주시장과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지난 기간 버스 파업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야 했던 전북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 대책위 역시 내일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

버스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각계 계층의 수많은 중재노력에도 사측이 모든 중재안을 거부했던 것을 시민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인정하며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렸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사업주들은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송하진 시장과 김완주 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들의 직을 걸고 대타결이 나올 수 있도록 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과 복지를 챙기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민주당 일색인 전북지역의 정치권은 중요한 민생문제인 버스파업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파업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버스 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하게 되었다.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내일 만남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이 담긴 합의안을 도출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버스파업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파업 과정에서 드러났던 보조금 등 버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1. 4. 21 목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